



12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

2016. 12. 1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. 11월의 금융개혁	1
①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	
②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	
③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	
④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ELS시장 건전화 방안	
II. 향후 주요 과제	3
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추진	
② 기술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	
③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	
④ 금융권 성과중심 문화 정착	
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	
⑥ 핀테크 활성화 추진	
⑦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 지속 추진	
III. 주요 현안	12
① 금리상승 대응방안	
② 가계부채 관리방안 추진상황	
③ 우리은행 민영화	
④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	

I. 11월의 금융개혁

①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(11.2일)

- P2P 대출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한도 설정, 고객자금의 분리 보관 등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

① (투자한도) 투자자별 투자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된 투자한도 마련

*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 누적금액 ① 전문투자자(개인)·법인 : 한도없음
② 이자·배당소득 2천만원↑ 등 소득적격 개인 : 4천만원, ③ 일반 개인 : 1천만원

② (고객자산 분리 관리)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·신탁토록 하여, P2P 업체가 투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

③ (정보 공시) P2P업체가 차입자 신용·담보 정보, 차입자 부담비용(이자, 수수료 등) 등 투자·차입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

➔ 행정지도를 통해 금년 중 'P2P 대출 가이드라인'을 시행(단, 기존 업체에게는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 부여 예정)

②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(11.7일)

- 시행 10개월간 102건의 펀딩이 성공(161억원, 성공률 43%)하는 등 시장에 안착하여 창업·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중

→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 노력 배가

① (투자자 참여 확대) 투자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펀딩 성공기업 주식의 거래시장(KSM)을 개설(11월)하고 일반인의 투자접근성* 제고

*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도 다양한 매체에서 광고를 허용하고, 크롬 등 다수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인 청약시스템(Bankpay)으로 개편 등

② (기업 참여유인 제고) 일정규모 이상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코넥스 시장 특례상장 허용(KSM 상장기업은 기준 추가 완화)

- 펀딩 단계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'Seeding 펀드(78억원)'를 신설하고,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후속 지원 확대

③ (시장 형성) 투자자가 성공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넷에 투자정보 아카이브(정보창고) 마련

➔ '17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후속 조치를 시행

③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 (11.10일)

-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용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, 공매도 및 공시제도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

①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신설 및 공매도 규제 위반시 제재 강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

② 투자자들이 기업의 주요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정공시 기한 단축,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의 의무공시, 진행단계별 정보제공 확대 등 공시 제도 정비

➔ 법 개정 사항*은 연내 발의를 추진하고, 그 외 사항도 '17.1분기 시행을 목표로 조속한 후속조치 추진

*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제한, 공매도 규제 위반을 시장교란행위로 처벌

④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ELS시장 건전화 방안 (11.23일)

① 장내 파생상품시장에서 보다 다양한 파생상품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공급·수요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정비*

* 상장절차 간소화, 신상품 출시, 투자자 진입규제 정비(헤지전용계좌 도입, 진입단계별 교육시간 차등화) 등

② 장외 파생상품시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논의 동향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*

* 중앙청산 대상 확대, 증거금 규제 도입 등

③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경우 증권사 및 시장 리스크 관리*와 투자자 보호 체계**를 강화하는 한편,

- 파생상품 투자펀드 등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체상품 활성화

* 주기적 스트레스테스트 제도화,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구분관리

** 독취 의무화, 투자자 숙려제도 도입,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 등

➔ '16.4분기부터 '17.3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시행

II. 향후 주요 과제

1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 추진

< 추진 배경 >

□ 금융규제테스트베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사업자가 “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해당 서비스를 일정기간 테스트”하는 제도

- 보통법(common law) 체제 下의 영국, 호주, 싱가포르 등에서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도입 추진중(☞참고1)

* (예) 일부규제 면제(Waiver), 한정인가, 지정대리인(Sandbox umbrella), 비조치의견서 등

< 추진 현황 >

□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제 금융시장과 유사한 가상환경에서 사전 테스트하는 **Virtual Test-Bed***는 현재 운영중

* 핀테크 오픈플랫폼('15.12월), 로보어드바이저(RA) 테스트베드('16.9월)

□ 국내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**KDI 용역 실시**('16.9월 완료)

<KDI 연구용역 주요 내용>

◇ 우리나라와 테스트베드 도입국가들과의 법체계 차이를 고려할 때 외국의 사례를 국내에 즉시 도입하기는 어려우며 단계적 도입 필요

* 법에서 원칙만을 정하고 감독당국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 영국 등과 달리, 우리나라는 법에서 규제의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감독당국에 부여된 재량 여지가 제한적

< 향후 계획 >

□ 우선 기존 금융업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법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부터 '17년중 1차로 추진

- * ① 비조치의견서: 새로운 서비스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제재를 면제
- ② 위탁테스트: 인허가 금융회사가 서비스개발업체를 대신하여 시범사업을 수행
- ③ 지정대리인: 미인가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시범사업을 수행

□ 1차 테스트베드의 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규제면제, 한정인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(특별법 제정 등)을 검토

참고 1

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해외사례

가. 기존 금융업자 대상

① 개별지도 (individual guidance, 영국)

- 금융회사가 도입하고자 하는 신규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금융규제 적용 기준에 대해 질의하면 이에 대하여 개별 유권해석 제공

② 특례 적용 (waiver, 영국)

- 특정 금융회사에 대하여 신규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금융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변경 적용

③ 비조치의견서(영국) 및 규제 면제(industry-wide relief, 호주)

- (비조치의견서) 신규 금융서비스 관련 특정 행위가 감독당국의 제재 대상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회신

※ 제재부과 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재량범위가 넓은 영국·호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금융법에서 제재요건, 부과여부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한 규제면제 여지가 제한적

- (규제면제)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혁신의 경우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자에게 관련 규제 적용 면제 가능

나. 미인가 사업자 대상

① 한정인가 (tailored authorization, 영국-호주)

- 전체 인가요건 중 테스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요건만 충족하면 한시인가를 부여하여 영업행위를 수행 가능

② 지정대리인 (appointed representative, 영국-호주)

- 인가 취득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 테스트를 원하는 미인가 기업에 영업행위 대리권한 부여

③ 인허가 면제 (licencing exemption, 호주)

- 일부 금융상품(파생상품, 비유동성상품 등 제외) 관련 자문서비스 및 투자중개서비스에 대해서 정식인가 없이 서비스 테스트 허용

② 기술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

< 추진 배경 >

- 기술금융은 양적*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점차 정착되어가는 단계
 - * ① '16.9말, 기술금융 대출 52.8조원 공급 →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경로로 안착
 - ② '16.9말, 기술금융 투자 5,790억원 집행 → '15년말 2,599억원 대비 큰 폭 증가
- 다만, TCB 신뢰성 부족, TDB 활용도 미흡 및 기술금융 위주의 여신관행 미정착 등 일부 제도개선과 내실화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
- ⇒ 기술금융을 대출·투자 의사결정의 핵심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기술력을 신용등급 결정의 핵심 요소로 내재화 할 필요

< 추진 방향 >

- ① '19년까지 기술금융 대출·투자 공급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 추진
 - * 기존 설정 목표('16년)
(대출) ('16년)50조원 → ('17년)67조원 → ('18년)84조원 → ('19년)100조원
(투자) ('16년)0.5조원 → ('17년)0.7조원 → ('18년)0.9조원 → ('19년)1.0조원
- ②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금융이 여신심사시스템에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
 - ① 總量 중심의 평가로 은행권 경쟁유인 제한 → “기술금융 실적을 제대로 평가”
 - ② TCB·TDB의 기술평가 지원 서비스 부족 → “TCB·TDB 인프라 정비”
 - ③ 기술금융 투자는 대출 대비 1% 수준 → “기술금융 투자 활성화”
 - ④ 기술금융 확산에도 재무중심의 평가 지속 → “신용평가와 기술 평가를 통합하는 등 여신관행 개선”

< 향후 계획 >

- 금융권 공청회(12.8일)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「기술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」 마련 예정('17.1월) → '17년 업무계획 반영

③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

< 추진 배경 >

- 금융의 대형화·겸업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제도를 도입('00.11월)하였으나, 당초 취지에 미흡
 - (규제·감독측면) 강한 분업주의 규제체계 및 칸막이식 감독 지속
 - (지주운영측면) 주력자회사 중심의 경영으로 비주력자회사의 경쟁력 저하, 전략·조직운영·영업 등에서 그룹차원의 통합관리 미흡*
- * 지주사·주력자회사간 경영권 분쟁 등 지배구조상의 문제점도 노정
- ⇒ 금융지주제도를 통해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도약한 외국사례를 감안, 규제체계 및 운영방식을 일대 전환하여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발전
- * 각 업권별 발전방안이 기 마련된 만큼, 총괄적으로 금융지주 발전방안 강구
[은행] 은행의 자율성·책임성 제고방안('15.8.13), 비대면 실명확인제 도입('15.12.2)
[보험] 경쟁력 강화 로드맵 마련('15.10.16) [금투]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('16.8.2)

< 추진 현황 >

- 감독당국·업계·전문가로 TF 구성, 금융지주발전방안 검토중
- * 기 수렴한 업계 건의사항, 외국제도, 글로벌 금융지주 사례 등 토대로 검토

< 개선과제 예시 >

- (규제·감독측면) ①검직 활성화, ②인사·조직 운영 등 통합관리, ③고객정보 공유 확대, ④전산·자금 공동관리 등을 위한 업무위탁 활성화, ⑤권역별 감독 → 금융지주 감독으로 전환 등
- (지주사운영측면) ①사업부방식으로의 재편, ②지주사의 전략·인사·조직운영·자금관리 등 통합운영 강화 등

- ⇒ 규제체계 개편 및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 그룹과의 격차를 해소

< 향후 계획 >

- TF안을 토대로 공청회(금융연구원 주관, 12월) 등 폭넓은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후, 17년중 법규 등 제도개선 추진

참고 2

국내외 금융지주사 비교

구 분		한 국	미 국	일 본
지주위상	소속 자회사 (평균)	약 37개	약 2,100개	약 210개 ¹⁾
	그룹총원 (평균)	약 2만5천명	약 20만명	약 5만명
	지주총원	약 150명	약 1만5천명	약 1,500명
	지주인력 비율 (평균)	약 0.6%	약 6.5%	약 2.3%
수익 다 각 화	비은행 수익 (평균)	약 30%	약 50%	약 50%
	부문별 수익	은행 63%, 카드 21%, 금투 6%, 보험 10%	리테일 50%, CB 26%, IB 24%	리테일 30%, CIB 40%, 글로벌 30%
	해외수익 (평균)	약 19% ²⁾	약 50%	약 35%
지주회사 운 영 관 련	사업부제 운영	▪ 일부 사업별(PWM, CB) 사업부제 도입 ▪ 재무, HR 등 후선 기능도 각 자회사 별로 수행	▪ 사업리테일 CB, WM 등, 지역(북미, 중남미, 아시아 등), 기능(재무, IT, HR 등)의 3개축을 중심으로 사업부문제 운영중	▪ 사업리테일 CB, WM 등, 기능(재무, IT, HR 등)의 2개축을 중심으로 사업부문제 운영중
	성과평가	▪ 개별 자회사의 장이 사업부문 소속 직원을 평가 ▪ 사업부문의 성과 평가 및 보수 결정 권한 부재	▪ 사업부문장이 소속 직원을 평가 ▪ 개별 자회사 CEO는 대외적인 업무만을 수행	▪ 사업부문장이 소속 직원을 평가 ▪ 개별 자회사 CEO는 대외적인 업무만을 수행
	검직	▪ 검직이 아직 미활성화	▪ 지주 CEO - 핵심 자회사 CEO, 지주 부문장 - 자회사 CEO 또는 임원	▪ 지주 CEO - 핵심 자회사 CEO, 지주 부문장 - 자회사 CEO 또는 임원

④ 금융권 성과중심 문화 정착

< 추진 배경 >

□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면 금융권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더 이상 지체하기가 어려운 상황

○ 美 新행정부 등장으로 금융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어 경쟁력이 낮은* 국내 금융사들이 도태될 우려

* 제조업과 금융업 생산성 비교('13) : [韓]1.4 : 1.0, [OECD]1.6 : 1.7 (제조업:금융업)

⇒ 금융권이 성과중심 문화를 도입하여 연공서열, 온정주의 등 낡은 관행을 개혁하지 않으면 “우리 금융에 미래는 없음”

< 추진 현황 >

□ 금융공공기관들은 '17년에 성과연봉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내부 과정관리¹⁾ 및 평가제도 정비²⁾ 진행 중

- 1) 직원설명회, 노사공동워크숍, 노사협의회 등 제도 설명 및 공감대 형성 지속
- 2) 평가모델 시범테스트, 직원의견 수렴 등

□ 민간 금융권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, 직원설명회 등 다각적 노력을 진행 중으로 조속한 도입 기대

< 향후 계획 >

□ (금융공공기관) '17년부터 성과평가 등 성과연봉제 시행

* 기관별로 제도 운영, 현장 정착도 등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외부전문가 점검 추진

□ (금융위) 금융공공기관별 성과중심문화 도입 평가를 감안하여 '17년 예산편성, 경영평가 등을 수행

□ (금감원)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

○ 경영실태평가 부문(CAMEL-R) 중 경영관리의 적정성(M) 및 수익성(E) 평가 시 성과중심 문화 도입·이행 상황 점검

평가부문	평가항목	세부 점검사항
경영관리 적정성(M)	성과보상체계 적정성	- 개인 성과와 역량에 따른 기본급·성과급의 차등 - 성과평가체계상 질적지표와 계량지표의 균형 등
수익성(E)	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	- 연공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불합리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마련 여부

1) 일 금융청 인가 은행지주 소속회사

2) 국내 은행권 기준

5 『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』 개정

< 추진 배경 >

□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중점 추진중*

* 금융소비자 규제 강화방안('15.12), 대출 계약 철회권 시행('16.10월~), 고위험 투자 상품에 대한 적합성 보고서 제공('17.1월~),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추진 등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 확대
-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소송 등 사후구제를 강화하며 고령자,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이용환경 개선에 중점

□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이나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감안, 법 제정 전 추진가능 과제를 모범규준을 통해 선시행

< 추진 현황 > 「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」 개정 추진

① (인센티브 체계 개선)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판매실적 등에 따른 보상 비중이 과도하지 않도록 유도

- (소비자 만족도 관련 요소 반영) 민원건수, 미스터리쇼핑 평가결과,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균형 있게 반영
 - (CCO* 역할 강화)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(CCO)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인센티브 체계를 검토, CEO에게 보고하고 개선 건의
- * Chief Consumer Officer

② (금융회사 자료 접근성 강화) 소송 등 수행시 금융회사 보유자료를 포괄적으로 열람·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 강화

* 금융회사 영업비밀, 타 법령에 열람제한이 있는 경우, 권리구제목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람 허용

③ (금융취약계층 편의성 제고) 취약계층(고령자, 장애인 등)의 정확한 상품이해 및 적절한 금융거래를 위해 상품개발, 판매, 사후관리 등 금융거래 단계별 보호절차 마련

< 향후 계획 >

□ 행정지도 절차(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)를 거쳐 '17.1월중 시행

6 핀테크 활성화 추진

< 블록체인* 기술과 금융서비스의 융합 추진 >

* 거래 데이터를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·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 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(distributed ledger)를 의미

□ 금융권은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
- 정부도 「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('17.1분기 마련)」의 주요 과제로 '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서비스의 융합'을 추진중

① (블록체인 컨소시엄) 업계 수요에 기초하여 은행과 금투업권이 우선 블록체인 컨소시엄* 구성(은행: 11.30일, 금투: 12.7일 출범)

* 고객인증, 전자문서 검증, 금융투자상품 청산결제 등 연구 진행

- 컨소시엄간 소통채널로 금융당국, 업계, 전문가가 참여하는 「블록체인 협의회(11.24)」를 통해 정보공유, 제도개선 추진

② (디지털화폐)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(11.17)를 중심으로 디지털화폐 제도화 관련 이슈* 검토('17.1분기 방안 마련)

* 디지털화폐의 법적정의, 거래소 등록제, 자금세탁방지, 외환규제 등 논의

※ 최근 해킹 등 불법행위의 대가로 디지털화폐를 요구하거나 유사 디지털화폐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있는데,
○ 디지털화폐 제도화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건전·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임

< 핀테크 Demo Day 개최 >

□ 핀테크 지원센터는 12.1일 「2016 창조경제박람회*」와 연계하여 「제13차 핀테크 Demo Day」를 개최

*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창조경제박람회는 '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'와 '창조경제 성과의 글로벌 진출'을 주제로 개최

- 행정자치부·인터넷진흥원(KISA)의 '핀테크 보안·인증'에 관한 주제 발표에 이어, 7개 스타트업이 기술을 시연할 예정

※ 제14차 Demo Day는 12.8일 「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」 오픈과 연계하여 개최

- 12.22일에는 북경에서 핀테크 Demo Day를 개최할 계획

7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 지속 추진

< 추진 배경 및 추진 현황 >

□ 현장점검반은 '15.4월 최초 현장방문 이래 '16.10월까지 1,126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총 5,417건의 건의를 접수

⇒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·제도개선 과제 3,919건 중 3,224건에 대해 회신을 완료하였으며, 그 중 1,553건 수용(수용률 48.2%)

□ 연말을 맞이하여 금융개혁의 온기가 현장 구석구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①서민금융 현장 집중점검을 추진하는 한편,

○ 그간 추진해 왔던 ②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, ③비조치 의견서 일괄회신 등 주요 현안업무 마무리

< 향후 계획 >

① 12월을 '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'로 지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 등을 집중 추진

○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기관* 방문

→ 채무조정, 채권추심 개선,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현황 등 주요 서민금융정책 착근 여부 점검

* (7일) 성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, (8일) 신용회복위원회(채무조정 지원현황), (13일) 신용정보원, (14일) 전통시장, (15일)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, (21일) 신용정보협회(채권추심 개선방안 이행 점검) 등

②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(12월 중순)

○ 금년 7월 외국계 CEO 간담회 이후 기재부와 함께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TF를 운영, 그간의 건의사항을 검토

→ Global Standard와의 규제 차이, 외국계 영업특성(지점 형태, 법인 영업 위주, 본사와의 연계 영업 등) 등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 지속 추진

③ 비조치 의견서(No Action Letter) 일괄 회신 추진

○ 그간 반기별('16.2.7월)로 금융회사 비조치 의견서를 일괄회신*

→ 현재 은행연, 금투협 등 각 업권 협회를 통해 비조치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으며, '17.1월 중 일괄회신 추진

* '01~'14년간 총 10건 → '15~'16.11월 : 1,098건(일괄회신 885건, 온라인 213건)

III. 주요 현안

1. 금리상승 대응방안

가. 최근 금융시장 동향

◇ 美 대선 직후, 국내외 금융시장은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, 점차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

□ (주식시장) 국내 증시는 美 대선 직후 일시 하락(△2.2%) 후, 빠르게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

* 코스피 추이 : (11.8일)2,003 → (11.9일)1,958 → (11.10일)2,003 → (11.30일)1,983

* 美대선 후 증시등락률(%) : (MSCI선진)+1.4, (MSCI신흥)△4.9, (美)+4.4, (獨)+1.3 (韓)△1.0

○ 외국인 자금도 일시적으로 유출되었으나 최근 유입세로 전환

* 外人 주식순매수(조원) : (11.9~11.15일)△1.2, (11.16~11.30일)+1.4, (美대선 후)+0.2

□ (외환시장) 원/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으로 상승(절하)세를 지속하다가 11.21일 이후에는 하락(절상)세 전환

* 원/달러 환율 : (11.8일)1,135 → (11.9일)1,150 → (11.21일)1,187 → (11.30일)1,16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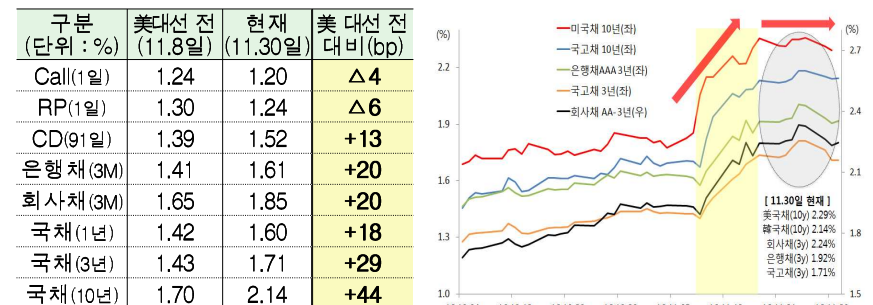
* 美대선 후 통화절상률(%) : (달러인덱스)+3.1, (유로)△3.4, (엔)△6.4, (원화)△2.9

□ (채권시장) 채권금리는 美대선 후 급등세를 보인 美 국채금리와 동조화되며 7~8일간 빠르게 상승했으나, 점차 안정을 찾는 모습

○ 장기물 채권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, 콜·RP 등 단기금리의 하락 속에 CD금리(호가)는 상승폭이 제한

○ 11월중 수요예측을 통한 회사채 발행은 전년동월(2.6조원) 대비 큰 폭 감소한 1.4조원에 그치는 등 금리상승 속 발행여건 위축

< 최근 시장금리 변동 추이 >



* 은행채 AAA, 회사채 AA-

나. 금리 변동 원인 및 전망

□ (시장금리) 다음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금리 상승

① 韓 장기국채와 美 장기국채간 금리의 동조화 추세 지속

* (IMF, 16.9.29일) 美 장기금리 1%p 상승시 韓 장기금리는 약 0.47%p 상승
(HSBC, 11.30일) 15.6월 이후 美 국채금리와 韓 국채금리의 상관계수는 0.77로 매우 높음

② 연말 북 클로징을 앞두고 일부 금융회사에서 손절성 매도

③ 美 FOMC(12.15일)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장에서 先반영

□ (대출금리) 11월 채권금리 급등으로 가계·기업대출금리가 상승하고 특히, 고정금리대출의 금리가 빠르게 상승

※ 공식 금리통계(한은)는 약 1개월의 시차가 있어 11월 대출금리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은행들이 차주에게 제시하는 금리 기준으로 분석

○ 고정금리대출의 금리는 주로 금융채와 연동되어 있어 연동된 채권의 금리 변동이 대출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

* ① 주택담보대출(주요 4개은행 평균, 장기분할상환 기준)

고정금리 : (9말경)2.74%~4.70% → (11말경)3.3%~4.8% (평균 58bp↑)

변동금리 : (9말경)2.57%~4.35% → (11말경)2.8%~4.5% (평균 20bp↑)

② 중기대출(A 은행 사례, 1년만기, 80~85% 보증부대출, 중하위신용등급 기준)

고정금리 : (9말경)3.23%~3.43% → (11말경)3.55%~3.75% (32bp↑)

○ 최근 금리 상승분은 주로 시장금리 상승에 기인하고, 일부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도 작용

* 주담대 고정금리 상승분 : +58bp = 기준금리 상승(+54bp) + 가산금리(+4bp)

주담대 변동금리 상승분 : +20bp = 기준금리 상승(+10bp) + 가산금리(+10bp)

중기대출(1년만기) 고정금리 상승분 : +32bp = 기준금리 상승(+32bp)

□ (금리전망)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금리의 급격한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

※ 당분간 美 국채금리가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에 12월 美 기준금리 인상이 先반영되고, 손절매도 일단락된 점을 감안

- 1B 등의 美 국채금리(10y) 전망(Bloomberg, %) : (16말)2.23, (17.1Q)2.25, (2Q)2.33 (17말)2.53

○ 다만, '17년 美 금리인상 속도(횟수), 美 재정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국내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

다. 금리상승의 파급영향

□ 채권 및 대출금리의 급등세가 유지될 경우 기업, 가계, 금융회사 등 국내 경제·금융 전반의 활력이 저하될 가능성

① (기업) 회사채·CP 등을 통한 신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CD·은행채 등과 연계된 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도 상승

⇒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상승이 지속될 경우, 설비투자 및 고용 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

② (가계) 코픽스·은행채·CD 등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와 연계된 신규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기존 변동금리대출의 이자부담 증가

※ 변동금리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코픽스(신규)는 1개월의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시장금리 상승 반영

⇒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할 경우 서민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부담이 커지고 소비여력이 제한될 가능성

③ (금융회사) 금리상승이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에 긍정적 측면*도 있으나, 단기적으로는 보유채권의 평가손실 등이 발생

* 은행·저축은행·상호금융 등 예대마진 확대, 보험사 역마진 축소 등

⇒ 자산가치 하락, 금리 리스크 등으로 금융회사가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경우 여신운용이 엄격해질 가능성

◇ 최근 금리상승은 美 금리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여 경제 전반에 파급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응

➡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

① 재정, 금융, 외환, 통화당국간 협력과 정책 조율을 강화하여 일관된 정책방향하에 유기적 대응(Coordinated Effort)

② 국내외 금리 추이, 외국인 자금흐름 등 시장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국내외 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선제적 대응

③ 가계(예 : 주택금융공사 등), 기업(예 : 신보·기보 등)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 강화 등 정책역량을 집중

④ 금리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확대되는 서민·취약계층 지원 강화

라. 금융부문 대응방안

(1) 관계기관 협력 및 모니터링 대폭 강화

- ① (거시경제금융회의 등) 기재부, 금감원, 한은과 매주 1회 차관급 회의를 운영중으로 앞으로는 실무협의도 한층 강화

-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간 정보 공유 및 적극적 협력 추진

※ 국채 발행 시기 조절 등 다양한 방안을 기재부 등과 협의

< 최근 채권금리 상승 관련 시장안정 조치 >

- ▶ (기재부) 12월 국채 발행물량을 전월대비 1.45조원 축소(4.7조원 발행)
- ▶ (한은) 국채매입, 통안증권 발행 축소, MBS 담보증권 인정기간 연장 등
 - ① 한은 1.27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매입(11.21일)
 - ② 11.28일 통안채 발행물량을 1조원에서 0.3조원으로 (△0.7조원) 축소
 - * 12월중 통안채 발행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예정
 - ② 주금공 MBS의 담보증권 인정기간(당초 금년말)을 '17년말까지 연장(11.25일)

- ② (금융위/금감원 비상 대응반 가동) 위/원 합동으로 금리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·점검 강화(매주 1회 점검회의 개최 원칙)

※ 12월 FOMC 동향 점검 등을 위해 금감원 해외사무소 등 국제 네트워크 가동

- ③ (금리체계 적정성 점검) 금감원이 12월초까지 금리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완료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지도

- ④ (스트레스테스트) 금감원이 엄격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금리상승이 금융업권 차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 실시

- 은행, 보험, 상호금융 등 전 업권을 대상으로 금리상승시 업권별·차주별 취약성 점검
- '16년 말까지 1차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, 상황변경을 반영하여 수시로 실시
-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맞춤형 대책* 마련에 활용

* 선제적 자본확충, 부실자산 정리 등 단계별 건전성 강화조치, 채무불이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채무조정,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

(2) 기업 자금조달애로 완화

- ① (회사채시장 활성화) 既 발표한 「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 ('16.7월)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

【조치완료 사항】

- ① 「대출형 사모펀드(전문투자형)」 조성·운용

* '16.10월초 현재 22개가 조성되어 4,400억원 집행(직접 대출 3,600억원, 대출채권 매입 800억원)

- ② 「투자유의채권 지정제도」 도입

* 회사채 가격 급등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“투자유의채권”으로 지정 예고하고 이상 급등시 1일간 거래를 정지함으로써 시장안정성 제고('16.10월 거래소 규정 개정)

- ③ 「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」 일몰기한 연장

* 중위험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('16년말 일몰)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는 '17년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(조세소위에서 합의 완료)

【조치중인 사항】

- ① 채권전문딜러 역할 강화*, 유동화증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 요건 완화(BBB이상→BB이상), 회사채펀드 신용평가 활성화** 등 잔여과제를 '17.1분기내 최대한 완료

* 회사채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인의 호가제시 의무종목 확대 등

** 주요 채권형 펀드에 대해 신용평가사가 2년간 수수료 없이 신용평가 제공

- ② 산은 등의 「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」을 통해 최대 5천억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 ('17.1분기 개시)

【기대 효과】

- 대출형 사모펀드 및 하이일드 펀드 투자가 확대되면 향후 금리인상 따른 기업자금 조달 애로가 경감되고,
-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위험 회사채 발행 여건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

② (P-CBO발행 지원) 보증기금의 유동화보증을 통해 중소·중견 기업의 회사채 발행 적극 지원

※ 신보 P-CBO '16년 공급계획: 신규 0.7조원, 재차환 1.2조원

③ (대출 보증확대) 신·기보가 금리상승으로 인한 자금난 등 일시적 경영애로 확대에 대비, 중기 대출에 대한 보증확대

※ 금년중('16.1~10월) 보증 공급현황(조원) : (신보)38.2조원, (기보)17.9조원

④ (채권시장 안정펀드)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

※ 90개 금융회사와 채권시장 안정펀드 운영을 위한 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으며 Capital Call 방식으로 최대 10조원까지 운영 가능 → 필요시 확대

(3) 금리상승에 대비한 서민·취약계층 지원 강화

① (서민금융) 금리상승시 금융접근성이 크게 제약될 수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정책서민금융,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 확대

* 정책금융 : 은행권 휴면예금 신규 출연 등 공급여력을 금년(5.7조원)보다 확대

* 중금리 대출 : 은행권 공급목표 5천억원은 '17년 상반기 중 소진 예상
→ 공급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및 참여 은행 등과 협의예정

② (정책 모기지) 서민층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 강화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는 등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개편 추진

* 내년부터 개편방안을 시행할 예정으로 12월중 개편안 마련 예정

③ (연체차주 지원) 한계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 추진 (은행권과 함께 TF를 구성, 내년초까지 운영하여 방안 마련 예정)

* 서민·취약계층의 연체 후 담보물 경매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검토(아래는 예시)

- ① 실직·휴업 차주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상환 유예제도 확대
- ② 연체 후 담보권 실행까지의 절차, 채무재조정 절차 등 안내 강화, 경매 유예 확대 등 프리워크아웃 활성화
- ③ 연체이자 부과체계의 적정성 점검

2. 가계부채 관리방안 추진상황

가. 11.24 가계부채 후속조치의 특징

□ 11.24 「가계부채 후속조치」는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“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는” 원칙의 일환

➡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선진형 여신관행 정착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가계부채의 모든 부분에 빠짐없이 적용되는 효과

① (전업권) 은행·보험권에 적용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·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 적용

※ 은행(수도권 '16.2월~, 비수도권 '16.5월~) → 보험('16.7월~) → 상호금융/새마을금고('17년 초)

② (집단대출) 개별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잔금대출('17.1.1이후 분양공고분)까지 확대

* 중도금대출은 ①보증부대출이고, ②대출성격상 상환만기가 짧아 분할상환 등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

③ (신용대출 등 기타대출) 총체적 상환능력심사(DSR)를 통해 전 대출에 대해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이 이루어지는 기반 마련

- (현행) 차주가 보유한 대출잔액 정보를 토대로 이자율·만기·상환구조 등은 시장 평균정보를 적용하여 상환부담 추정

- (개선) 차주가 부담하는 실제 이자율·만기·거치기간 등 상환구조를 적용하여 차주별 상환부담을 정확히 산정

<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및 DSR 적용 시기 >

			'16.上	'16.下	'17.上~
주담대	은행	가이드라인	→		
		DSR	→		
	보험	가이드라인	→		
		DSR	→		
	상호금융	가이드라인	→		
	새마을금고	DSR	→		
기타대출	전 업권	가이드라인	→		
	집단대출(잔금)	DSR	→		

◇ 선진형 여신심사관행이 금융현장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·보완하는 등 가계부채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

나.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기대효과

- ① (상환능력 심사 선진화) 상환능력심사가 강화되면 갚을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져 한계차주 감소 등 효과 기대
* 한국은행 「금융안정보고서(15.6월)」상 위험가구 수는 약 112만 가구
- ② (분할상환)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구조가 정착되면 차주가 큰금액을 일시상환하는 부담이 완화되고,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완화 기대
○ 은행권 주담대 잔액 중 43.3%가 분할상환대출이며, 상반기 중 공급된 신규 주담대의 85.4%가 분할상환으로 취급
※ 향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효과만으로 '19년까지 증가율이 5%p 이상 하락('16.9월 13.0%→ '19년 7~8%대 추정)할 것으로 기대
- ③ (고정금리)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는 금리상승기에도 이자상환부담이 증가하지 않아, 금리상승 위험성 완화 효과
*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대출 비중 : ('15말)35.7% → ('16.9)41.4%(16년목표 40%)

다.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향후 추진방안

- ① (서민/주택실수요자) 서민 실수요자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 모기지 개편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 공급
- ② (서민금융) 공급여력 확보 등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 및 중금리 대출 확대 공급
- ③ (연체차주) 프리워크아웃 제도개선 등 한계차주에 대한 연체 부담 완화방안 마련
- ④ (자영업자)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되 필요자금은 공급
①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연령별·지역별 등 세부 미시분석을 통해 리스크 요인 정밀 진단(12월중)
② 사업성 심사 강화,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업종 편중 리스크 관리 강화 등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
③ 급격한 대출축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·기보·지역·신보 등의 보증공급 및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병행
④ 은퇴세대의 주택연금 가입확대, 경기활성화를 통한 소득 증대 등 가계부채 상환능력 제고 추진

3. 우리은행 민영화

< 과점주주 매각절차 마무리 >

- ☐ '16.11.13 과점주주 7개사 선정(29.7% 낙찰)
- ☐ '16.12.1 주식매매계약(SPA) 체결(예금보험공사-각 과점주주)
- ☐ '16.12.14 Deal Closing(대금납입 및 주식양도 완료)

< 정부의 약속 이행을 위한 조치 계획 > ※ 아래 일정은 변동 가능

◆ 정부는 우리은행 매각 과정에서 투자자 및 국민과 약속했던 '매각 이후 우리은행의 자율 경영' 보장을 위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

- ① 경영정상화이행약정(MOU) 해지(12.16, 공자위)
○ 매각절차 종결(12.14) 후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-우리은행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(MOU) 해지
- ②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
○ 이사회(12.9)에서 후보 확정, 주주총회(12.30)에서 최종 선임
- ③ 향후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 확보
○ 행장선임의 자율성 보장
-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 중심으로 임추위 구성 → 주총에서 선임
* 예보 비상임이사는 임추위에 불참
○ 예보는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비상임이사 1인을 선임하되, 예보 지분을 하락시(예: 10% 미만, 최대주주 지위 상실) 非선임

※ 금융위원장-사외이사를 추천한 5개 과점주주 대표 간담회 예정(12.15)
▪ 상기 내용과 같은 '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부의 의지'를 전달
▪ 과점주주 스스로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롤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

4.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

< 해운업 >

- (현대상선) '중·장기 경쟁력 제고방안'을 마련 중이며, **Alliance** 협상, 터미널 인수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확정·발표 예정
 - '17.4월 2M(Maersk, MSC)과의 Alliance 운항 개시를 위한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협의중이며, 조만간 최종 합의·발표 예정
 - 스페인 터미널(알헤시라스)은 현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(11.25일)되었고, 미국 터미널(TTI)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여(11.28일)
 - 한진해운 해외인력 36명을 既 채용(100여명 채용 계획)하였고, 국내인력의 경우에도 한진해운 사내에 채용계획을 공지한 후 이력서를 접수(100여명)하는 등 채용절차 진행 중
 - (한진해운) 희생절차 신청 당시 화물을 선적중이던 모든 선박(컨테이너선 97척, 벌크선 33척 등 총 141척)이 하역을 완료(11.27일)
 - 한진해운 협력업체·중소화주 등에 대해 신규대출, 만기연장, 특례보증, 긴급안정자금 등의 금융지원*을 지속할 계획
- * 11.28일 기준,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538건, 1,964억원 지원
시중은행을 통해 104건, 1,737억원 지원

< 조선업 >

- 대우조선은 총 5.3조원의 자구계획 중 약 1.5조원을 이행하였고, 자구 계획 조기이행* 등을 통해 유동성 문제에 선제적 대응중
 - * 최근 지호사(다석·웰리브), 마곡부지(일부, 470억원 예상)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완료
 - Sonangol社 드릴쉽 정상인도를 위해 국제협상전문가 투입(11월)
 - 자본확충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여, 원활한 수주활동 등 경영정상화를 뒷받침
 - 중소조선사는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부족을 자체 해결하고,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
 - 이와 함께, 선종특화* 및 M&A(SPP조선) 등 경쟁력 제고 노력 지속
- * (대선조선) 소형 컨테이너선, 연안여객선 / (성동조선) 중대형 탱커 등